

● 지방국립대 '법인화 반대' 한 목소리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선데 대해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지방 국립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자립이 힘든 지방 국립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국립대 법인화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송희 전국국공립대교수협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백 달러로 일본 1만1천 달러, 스위스 2만9천 달러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본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국립대 법인화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 후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순귀 강릉대 교수회장도 "국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국립대 법인화까지 추진하면 대학 내 혼란이 가

중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서국웅 부산대 교수회의장은 "지방의 대학들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자립이 이뤄진 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교육부 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 의장은 "충북대에서 열리는 국교련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영길 부경대 교수협의회장은 "부경대 교수들은 교육부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국립대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재활복지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공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적자구조"라며 "법인화가 이뤄진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장애학생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재활복지대는 장애학생의 비율이 전체 정원에 50%에 달하고 이들에게는 수업료 면제 등 각종 혜

택을 주어지고 있으며, 법인화될 경우 수업료 인상은 물론 장애학생들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경대 관계자도 "국립대 자체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우리 사회는 아직 국립대 법인화를 받아들일 만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교수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전북대 관계자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정부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열어 구성원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전북대 공직협은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총장에게 일방적인 권한이 집중되고 국가의 관리통제가 강화되며, 국립대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협은 또 "교직원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의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대 교수협의회는 9월 23일 충남대에서 대학사학회 주관으로 변화와 개혁 속에 선 대학의 방

향 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갖고 국립대 법인화 문제 등을 집중 토론하면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서정복 충남대 교수협의회장은 “해마다 학생수는 줄고 발전기금 모금도 여의치 않은 지방 대학 여건을 감안할 때 독립 채산을 의미하는 국립대 법인화는 시기상조”라며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학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사립대교수 전공전환 프로그램 도입 검토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 시 통폐합 대상 학과 소속 교수들의 인접 전공 추가 학습을 돕는 '사립대학 교수 전공전환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단장은 9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학의 구조개혁 - 사립대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사)한국사립대수회연합회(이사장 박원주 영남대 교수 이하 사교련) 교육정책포럼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학과 통폐합 시 교수들을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한 교수의 질문에 “일부 대학의 요청

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학과 교수들이 인접전공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립대학 교수 전공전환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부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열린 대교협 총장세미나에서 몇몇 총장들로부터 이를 건의 받아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수요조사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김 단장은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따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는 힘들 것 같다”고 못 박으면서도 “이렇게 되면 고급인력인 교수인력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단장은 사립대 해산 및 통폐합 지원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의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 재산을 돌려주는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논란이 많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발표를 맡은 최충옥 경기도 교수(교육)는 이에 대해 “사립대의 재산은 이미 공적재산에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로금이라면 모를까 출연재산 환원은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밖에도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해

“방만한 국립대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사립대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사립대 재정지원 계획도 부족해 국공립·사립대간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부정·비리 사학의 척결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동시에 특단의 재원확보 방안과 국공립·사립대간 역할 재구조화와 협력체제 구축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교수 풀(pool)제 △교수단위 재정지원체제 △겸직교수제 △대학원 개혁 △전문대학의 커뮤니티 칼리지로 전환 △고등교육재정법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도입,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사교련 정책포럼에는 동아대, 진주국제대, 전주대, 위덕대, 조선대, 건국대 등에서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들이 참석해 사립대 구조개혁에 대한 대학가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 조만간 발표를 앞둔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일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높았으나 김 단장은 그동안 발표된 대학 정책 전반을 브리핑했을 뿐 별다른 정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 **사학법 개정안 합의 처리 무산**

정치권과 교육계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돼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는 9월 14일 오전 10~11시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로써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1년간의 여야 협상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 수순만 남겨놓은 채 사실상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게 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무산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성실한 협상과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장소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장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수

차례의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국민 앞에 확연히 보여준 것”이라며 “어느 쪽이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도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 최중안”이라며 “지난 1년은 물론 16대 국회 4년 내내 합의를 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으나 한나라당이 협의에 응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재성 의원은 나아가 “사학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에는 당 공식 의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다가 8월 26일이나 임태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우리당 의견과는 배치되는 자립형 사립고 법안을 사학법 개정안에 끼워 논의를 지연시켰다는 발상은 정치도외에 어긋나는 반칙 행위”라며 “김영숙 의원 법안이 형식적 방탄법안이라면 임태희 의원 법안은 내용상 명백한 방탄법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측 법안심사소위 의원인 이군현 의원은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

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협의를 가능한 대체법안을 여당이 내지 않을 경우 회의 참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 **울산국립대 신설안 사실상 확정**

울산국립대 신설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강길부 의원(열린우리당)은 9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3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울산국립대 신설안을 통과시켰으며, 기획예산처가 설계비 3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울산국립대는 입학정원 1천5백 명(개교당시 1천명) 규모로 2009년 3월 개교하며,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울산시는 부지 제공과 함께 1천5백억 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학과는 소규모 특성화 이공계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울산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되는 공학계열학과를 비롯, 공학 관련 경영학과와 사범계학과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울산시는 올 하반기

타당성 조사와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03년부터 본격 추진돼 온 울산국립대 설립이 결실을 보게 됐으며, 울산시는 청와대의 공식발표 및 설립협약 체결에 맞춰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강 의원은 “울산시민의 최대 숙원이었던 국립대가 설립되게 돼 시민과 함께 기쁘다”며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공약실천 의지, 울산시와 교육부 등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 ● 이공계 인력 육성 내년부터 본격화

이공계 대학의 교육혁신을 비롯해 핵심 연구인력 양성, 수요지향적 인재양성, 이공계 인력 복지지원 등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8월 29일 제1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제1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 첫 해인 2006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 12개 중앙행정기

관과 16개 시·도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로 이공계 대학혁신 등 5대 영역과 14개 중점추진과제, 42개 소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시·도가 2006년에 시행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 ● 구조개혁 4년간 2천49억 지원

오는 2008년까지 부산대(밀양대) 등 통·폐합 국립대 5곳(10개대)에 총 1천2백49억 원이 지원되고, 성균관대, 한양대 등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선정된 15개 국·사립대에 8백억 원 등 모두 2천49억 원이 대학구조개혁 예산으로 투입된다.

올해 5백억 원을 지원받는 통·폐합 국립대 5곳 중 부산대(밀양대)가 1백45억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으며, 3백억 원이 책정된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성균관대가 36억3천만 원으로 최다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28일 ‘2005년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학) 등 8개 국립대가 4개로 통·폐합된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 올해 통·폐합 국립대 가운데 부산대(밀양대)가 1백45억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으며, 뒤를 이어 지난해 통합을 선포한 공주대(천안공대)가 1백10억5천만 원, 전남대(여수대) 85억7천만 원, 충주대(청주과학대) 85억2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다년도 사업과 단년도 사업으로 나뉘어 총 15개 대학이 선정됐다. 오는 2008년까지 지원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올해 성균관대가 36억3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으며, 이어 △한양대 35억6천만 원 △경희대 35억4천만 원 △인하대 34억 원 △서울대 31억7천만 원 △고려대 26억8천만 원 △이화여대 25억5천만 원 △연세대 24억7천만 원을 받는다.

단년 사업은 인제대가 13억5천만 원을 비롯해 충남대 6억4천만 원, 경상대 6억2천만 원, 안동대·서울산업대 각 6억 원, 진주산업대 5억7천만 원 7곳에 5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지원 사업

결과 지난해 이미 통폐합된 공주대-천안공대 감축인원 7백2명을 제외한 4개 통폐합 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2천4백44명이며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200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6천7백18명이라고 밝혔다.

지원 예산은 국립대 통폐합은 대학 규모, 통합 후 대학의 입학정원 등을 기준으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은 심사결과에 의한 평점과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손실액을 8대 2의 비율로 적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분야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립대는 정원 감축을 철회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BK21 사업' 등에 구조개혁 실적을 연계할 방침이어서 실제 철회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확장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내년부터 철저한 중간평가를 통해 통·폐합과 구조개혁 추진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미 지급된 예산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 교육부, AP제도 도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6일, 오는 2007학년도부터 대학과목 선이수(AP)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P제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 입학 전 이수실적의 학점 인정 범제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유형의 고교-대학 연계교육을 발굴·전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수실적의 학점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 '05~'06년도 중·고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AP 제도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고, 이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해 고교와 대학교육간의 학습의 연계성 및 수월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55년에 도입돼 물리, 화학, 적분, 음악이론 등 31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 평가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사관고 및 대원외고 재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고교-대학 연계에 의한 AP제도 자율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입시과열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을 감안, 대학입학전형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AP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학생은 대학에서의 학습기간 단축과 학습비 절감의 효과를, 고교는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에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의 변화를, 대학은 우수 학생의 유치로 해당분야 학문의 발전을, 국가는 영역별 우수 인재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대학 구조개혁과 자율화 추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월 6일 "국제화된 고급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국제화해 가면서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과 자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제포럼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선진국에 못지않은 연구개발 투자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급인력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긴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

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확대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IT·BT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밖에 안되는 등 주변 경쟁국들의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경제가 혁신을 게을리 할 경우 장래의 성장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선 외환자유화를 확대하고 기업공시 및 감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방위적인 시장개방 등 글로벌 스탠더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또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블루오션을 찾아나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교육·의료·보육 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사립대 살림살이 인터넷 공개

사립대의 등록금과 교직원 급여, 수익용 재산 현황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회계정보 시

스템이 일반에 서비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대학별로 공개하고 있는 사학 회계정보를 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www.sahak.or.kr)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립대 회계정보 시스템’을 10월 27일 개통하였다.

이 시스템은 △대학별 예·결산 세부 내역 △연도, 계열, 학년별 등록금 평균액 △감사보고서 △연도별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사업체 현황 △결산 경영분석 등을 서비스하며, 각종 통계를 대학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회계는 교비, 법인일반, 부속병원, 법인수익사업,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으로 구분되며, 등록금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수입 등 ‘목’ 단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에 첫 공개된 정보는 각 대학의 올해 자금예산서와 지난해 자금계산서·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등록금, 통계자료 등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예산서는 3월에, 결산서는 9월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김화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예·결산서 공개로 인해 대학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학 비리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 ● 전문대학 학과평가 결과 공개

올해 전문대학 학과평가 결과 간호학과는 경북전문대학 등 11곳, 보건(안경광학)은 광주보건대학 등 2곳, 식품영양은 남해전문대학, 전자계산은 두원공과대학 등 3곳이 각각 ‘교육환경’과 ‘교육운영 및 교육성과’ 2개 영역에서 A+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26일 총 74개 대학 96개 학과가 참여한 2005학년도 전문대학 학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교원, 시설, 재정, 지원체제 등을 보는 ‘교육환경’과 교육목표 및 특성화, 교육과정, 강의, 학생지도,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는 ‘교육운영 및 성과’로 나눠 상대 평가한 뒤 A+(상위 33.3% 이내), A(33.3% 초과 ~66.6% 이내), B(66.6% 초과) 등급을 부여했다.

간호학과와 의 경우 경북전문대

학, 광주보건대학, 국립의료원간호대학, 마산대학, 삼육간호보건대학, 여주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 울산과학대학, 제주한라대학, 청주과학대학 등이 2개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았다.

보건(안경광학)은 광주보건대학과 순천청암대학이, 식품영양은 남해전문대학 호텔조리제빵과, 전자계산은 두원공과대학 인터넷프로그래밍과, 연암공업대학 컴퓨터정보기술과, 청양대학 컴퓨터정보과 등이 2개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았다.

### ● 사립대 기업기부금 쉬워진다

내년부터 사립대학들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는 10월 24일 "사립대학 기부금에 대한 손금(損金)처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인세법과

조세제한특별법 등 관련 세법 개정에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현재 기업들은 사립대학에 시설·교육·교육비 명목으로 기부할 때 해당 기부금의 절반만 비용처리를 인정받는다. 즉, 나머지 절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고 있다.

반면 기업들이 국·공립 대학에 기부금을 낼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사립대학에서는 "기부금 운용방식에 형평성이 없다"며 기업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에 대해 비용처리 범위를 국공립대학만큼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부금의 비용처리 인정범위를 국·공립대와 사립대학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즉, 내년부터 2008

년까지는 기업 기부금의 75%를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 손금으로 처리해준다. 이어 2009년부터는 절반을 인정해준다. 이처럼 단계별 방안이 마련된 것은 누적되는 세수부족 때문이다. 당초 재정부에서는 세수부족을 감안해 기부금의 절반에 대해서만 손금처리 하자는 입장이었고, 교육부에서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75%에서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들의 경우, 현재도 국·공립 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기부금을 거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기부금 모집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고 기부금 모집실적이 빈약한 대학은 자연스레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아 구조조정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학  
교육